

아이디어 가져오면 SK임업, 숲 내준다

산림자원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선발기업에 1100ha 숲 무상제공 사업 초기자금, 교육지원 등 혜택

SK임업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찾아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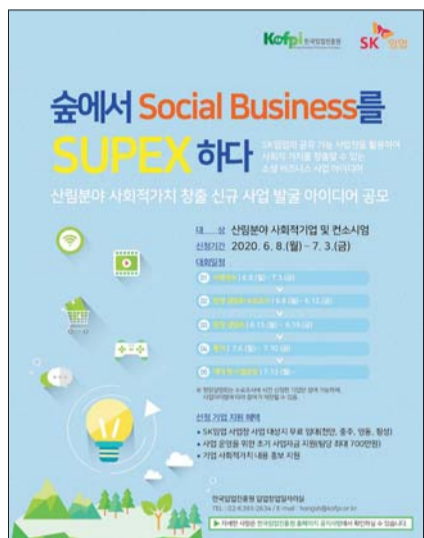
SK임업은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숲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수확하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SK임업은 50여년간 험벗은 산간 오지만을 매입하며 국가의 산림 녹화에 기여해온 기업이다. 1972년 고(故) 최중현 SK그룹 선대 회장 뜻에 따라 설립됐으며, 산림사업으로 장학사업 재원 마련 및 국가의 산림녹화를 주도해 왔다.

현재 충주, 천안, 영동,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횡성에서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사회적 기업 대상 '숲속야영장 횡성대피소'를 워크샵 등 행사 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천안에서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호두원을 운영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선발 기업에는 SK임업이 보유한 전국 4곳의 면적 1100ha 규모 숲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 인프라로



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 초기자금과 기술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참가자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 등록된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 또는 산림청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나 조림 대상지 인근의 마을공동체, 일반기업 등도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참가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사업 공모 서류는 한국임업진흥원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진행된다.

SK임업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윤 창출뿐 아니라 고용 창출과 지역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관광 안내 로봇 '파이보'.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일상화... AI로봇이 관광안내

'관광 플러스팁' 공모 6개사업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데 따라 앞으로 여행에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관광 해설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 관광 플러스팁스' 공모에서 6개 사업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관광 플러스팁스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관광 분야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광 부문 3개, 비

관광 부문 3개 등 총 6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관광형 통합교통 솔루션 ▲중소여행사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자원관리시스템(ERP) 플랫폼 ▲전 세계 어디서든 모바일 환전·충전이 가능한 외화선불카드 ▲야간관광 연계 드론 라이트 쇼 ▲AI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관광 안내 서비스 ▲여행자 구매·예약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AI 솔루션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사업화 지원금 약 4억원과 맞춤형 교육·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ik1@

박의장 주도, 與野 법사위 협상 '평행선'

민주당, 상임위배정 176명 명단 제출 통합당 "정수조정 필요" 요청 거부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전반 기원 구성 협상 시한인 8일 여야 원내 대표와 만나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면서다.

박 의장이 전날(7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자리에서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실상 최후 중재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8일 박 의장 요청에 따라 소속 의원 176명의 상임위배정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배정 명단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나오는 대로, 8일 상임위 구성을 위해 박 의장의 요청에 따라 12시 전에 상임위배정 요청의 건을 제출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상임위배정)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의장 요청을 거부했다. 배정에 앞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수는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며 "상임위 배정은 통상 의장 제안으로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것이 의결되면 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정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위별 정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의정실을 찾아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제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공문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정수조정 후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며 "통합당은 의장이 특위 구성안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장이 재차 원 구성 협상안 도출을 위해 재차 중재에 나서거나,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시한(8일) 내 상임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강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박 의장이 8일 오후 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 여야가 역지사지해서 국민 뜻대로 합의해줄길 바란다"며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을 의장단이 수용하겠다. 여야가 마음을 열고 합의해 이 방에서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께서는 (원 구성 협상) 합의될 때까지 이 방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규칙 개정이 끝나면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해 절박한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형훈 기자 choiyoungkr@

'아파트 텃밭' 스트레스 낮추고 공동체의식 높였다

농진청, 스트레스 지수 11% 줄어

농촌진흥청은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텃밭 활동이 주민 간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작년 3월~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진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웃관계 개선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의상과 인사법을 만들고, 역할을 나눠 텃밭을 관리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생의 텃밭 가꾸기를 돕는 한편, 텃밭에 핀 꽃으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작년 3월~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로 만든 장식·공예품과 채소 등 수확물을 이웃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텃밭 활동 구성원뿐 아니라 아파트 내 다른 주민과의 상호작용, 정서적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구진은 참여 주민의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참여 전

보다 각각 10%, 9% 높아졌고, 스트레스 지수는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텃밭 활동이 단순한 농사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등의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전통주 자조금 제도의 근간인 전통주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주 자조금은 관련 단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자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

대, 품질향상, 지역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조금의 조성 방법과 자조금의 관리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또 해당 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은 자체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토록 정했다. /한용수 기자